

구멍난 축산 관리시스템... 무너진 먹거리 안전

리뷰 2017

③ 살충제 계란과 시파문

친환경인증 농가서도 살충제 검출

사상 초유 계란 판매 중단 사태

영암·순천 등서 올해도 AI 발병

살충제 계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파문 등 올해도 어김없이 먹거리 공포가 전국을 휩쓸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문이 국내를 강타했다. 유럽에서 시작한 충격이 국내까지 뒤흔쳤다. 전국적으로 52개 양계농가가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1개 농가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전남에서도 7개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양계농가 5곳, 금지약품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양계농가 2곳이었다. 특히 나주의 산란계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가여서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계란 판매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계란값은 평상시의 몇 배로 치솟았고, 많은 식당들은 계란이 들어가는 요리

를 판매하지 못했다.

일파만파 확산한 '살충제 계란' 파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축방역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전남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양계 농가에 닭 진드기 방제약품을 지원했다. 이 약품에 포함된 성분 '비펜트린'이 결국 이번 파동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살충제 계란을 만들어 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허술한 위생관리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양계 농가에서 뿌리는 농약이 계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계란 조사과정에서 기준치 초과 농가와 '난각(껍질) 코드'를 잘못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의 원성만 샀다.

살충제 계란 파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경기·충남·경북 산란계 농장 등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살충제 계란 파문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영암 종오리 농가와 철새도래지 순천만·해남 금호호 철새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먹거리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왕이 사랑한 보물'전 개막 국립광주박물관이 주최하는 '왕이 사랑한 보물-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전이 19일 개막했다. 내년 4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는 드레스덴을 18세기 유럽 바로크 예술의 중심으로 이끈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제작·수집한 작품 130여 점이 선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토지 절반 地籍과 안맞다

광주시 2030년까지 시정

광주지역 토지 2필지 중 1필지 가량은 경계가 불분명한 이른바 '지적불부합'(地籍不適合) 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가 22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이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 39만 8000여 필지 중 지적불부합 필지는 18만 5000여 필지로 46.5%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지적도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고, 임야 등의 지적불부합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적불부합 재조사는 지적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른 것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22억9000만원을 들여 동구 내남 1지구 등 26개 지구 1만1094필지의 지적을 조정했다. 올해는 3억6000만원을 들여 동구 선교 1지구 등 5개 지구 1807필지의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또 내년에는 5개 자치구별로 1곳씩 5곳 모두 1900여필지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를 GPS 위성측량 방식으로 측정한 뒤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조정·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청년드림사업' 일자리 우수사례 대통령상

민선 6기 광주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공동 개최한 '지방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주시의 '청년드림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광주시에는 2억원의 시상금이 지원된다. 시는 이 시상금 전액을 청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드림사업은 지난 3월 미취업 청년(만 19~34세)들에게 4개월간 매주 25시간씩 사업장과 기관 등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광주시 생활임금(시간당 8410원)을 적용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청년드림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도 컸다.

17기(5~8월) 청년드림사업에 참여한 140명 중 44명(31%)이 직무역량 등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앞서 시는 민선 6기 들어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센터도 문을 열었다. 또 교통비 지원, 부채경감 지원, 주거서비스 지원 등 청년들에게 절실한 문제들도 해결에 나섰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광주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서도록 더욱 공격적으로 청년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마을대표 10명 중 9명 "마을 공동급식 만족"

여성 농업인 가사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마을 공동급식은 마을회관 등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농업인과 가족 등 20인 이상이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명목으로 마을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 1012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2%(862명)가 '매우 만족한다'(44.7%) 또는 '만족한다'(40.5%)고 답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89.2%·90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동급식 효과로는 '주인과 유대 강화'(42.9%·434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취사 부담 경감'

(31.2%·316명), '농업 생산성 향상'(18.2%·184명), '영농철 건강관리'(7.7%·78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전남에서 마을 공동급식을 이용한 인원은 여성 1만2951명, 남성 7289명 등 모두 2만24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만5172명(75.0%)으로 가장 많아 고령 농업인에게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올해에는 순천, 나주, 고흥, 영암, 신안 등 20개 시·군 1012개 마을에 20억2400만원이 지원됐다. 내년에는 253개 마을을 확대해 1265개 마을에 25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에는 급식 시설이나 조리 인력이 부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반찬 배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도 '전국 재난의료종합훈련대회'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전남도가 보건복지부 '2017 전국 재난의료종합훈련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대회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의료 지원 등 재난의료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보건소·의료기관·소방과의 협업 훈련을 평가하는 것으로, 17개 시·도에서 190여명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전남도는 동부권 재난 거점병원인 성가톨릭병원 의료지원팀 5명과 순천시·여수시·보성군 보건소 공무원 4명, 순천시 소방서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실제상황을 가상한 도상훈련, 현장 의료소 설치, 재난의료 끝판왕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검찰 이정현 의원 불구속 기소

무소속 이정현(순천시)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빠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이 도입되고 나서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나눔과 배움의 인성함양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만들어주실 멘토를 모십니다

-지역별 멘토 모집-

꿈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젊은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배움과 나눔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하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멘토가 되어주세요.

모집요강

- 신청기간 : 2017년 12월 19일(화) ~ 2018년 1월 15일(월) (일정 변경 가능)
- 한국장학재단 멘토링기획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위촉
- 신청대상 : 기업, 학술, 언론, 문화,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신 분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운영사무국 02) 2259-2640 ~ 2644
- ▶관련 사이트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 또는 재단 홈페이지 > 인재육성 >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안내
- 뉴스레터(www.kormentletter.co.kr)

활동내역

- 활동시기 :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 활동주기 : 월 평균 1회 이상
- 활동주제 : 인성교육, 자기계발, 진로탐색 등 대학생 관심 주제로 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링 및 특별활동(기업탐방, 봉사활동 등) 이외 재단 공식행사(코멘트 데이(워크숍), 리더십 콘서트 등) 참여
- 활동대상 : 전국 대학(원)생 중 선발
 - 1차 재단심사(2월) → 2차 멘토 면접(3월) → 최종 선발(3월말)
- 활동인원 : 멘토 1명당 대학생 멘티 6~10명 내외
- 지원사항 : 소정의 활동비(교재·교구비 등) 지원